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

제정예규안

1. 제정이유

-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를 집행할 장소에서 채무자나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하여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을 여는 등의 조치(이하 ‘강제개문’ 이라고 함)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체동산 압류집행 절차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집행관이 강제개문을 하려고 할 때에는 가능한 다양한 방식으로 채무자 거주 여부를 조사한 후에 강제개문 여부를 결정할 것을 규정 (제2조, 제3조)
- 집행관이 강제개문을 하였으나 집행장소가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거나 채무자의 주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개문의 사실, 이유, 연락처 등을 안내문의 형식으로 거주자에게 남기도록 규정 (제4조)

3.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 제정예규안

붙임과 같음

유체동산 압류집행절차에서 강제개문 시 유의사항

제정예규안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유체동산 압류집행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집행할 장소에서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경우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이하 ‘강제개문’ 이라고 한다)를 할 때 준수하여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강제개문 전 조사) ① 집행관은 강제개문을 실시하기에 앞서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집행할 장소가 채무자의 주거(창고, 사무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주민등록 또는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
2. 건물에 붙은 문패, 간판, 상호를 확인하는 방법
3. 주소지 내 거주자(건물주, 임차인), 인근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문의하는 방법
4. 그 밖에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집행관은 제1항의 방법으로는 강제개문 전 조사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주거임을 소명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3조 (강제개문의 실시) 집행관은 제2조에 따른 조사 결과 등을 참고하여 강제개문 실시 여부를 결정하되, 강제개문을 할 때에는 피해를 최소화하

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 (강제개문 후 조치할 사항) 집행관은 강제개문 즉시 채무자의 주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채무자의 주거가 아니거나 채무자의 주거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개문 사실에 관한 [별지] 안내말씀을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한 후 지체 없이 집행장소에서 나와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안내말씀

안 내 말 씀

집행장소 거주자님 귀하

사 건 번 호 : 20 본

집행장소:

출입·퇴거시간 : 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위 사건에 관하여 채권자의 강제집행 신청에 따라 귀택을 방문하였으나 아무도 계시지 않아 부득이 민사집행법 제5조제1항, 제6조에 의하여 두 사람의 증인 입회하에 잠긴 문을 열고 점유관계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채무자의 점유 또는 거주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서 즉시 퇴거하였으나, 이와 같은 공무집행과정에서 귀하에게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의 말씀을 드리오니 너그럽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댁에서 강제집행에 착수한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 ☐ 위 사건 채무자 ○○○의 주민등록지(사업자등록지)
☐ 건물에 붙은 문패, 간판, 상호로 판단
☐ 주소지 내 거주자(건물주, 임차인), 인근주민, 관리사무소 직원 등에게 문의
☐ 기타 사유 []

20 년 월 일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 집행관 ○○○

※ 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방법원 집행관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00-0000-0000)

민사집행법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광역시·구의 구 또는 동 직원, 시·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면지역에서는 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의안 소관 부서명>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민사지원제2심의관실	
연락처	(02) 3480 - 1567